

# ‘탈당’ 남경필·김용태 “새 보수당 창당”

새누리당 균열 본격화  
비주류 연쇄 탈당 기류  
김무성·김종인·손학규 등  
개헌고리 ‘3지대’ 연대 주목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및 친박(친박근혜)계 당 지도부의 사퇴 거부 등을 비판하며 탈당, 비주류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의 성향이 보수정당 내에서도 개혁적이었던 측면에서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과 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탈당 결행=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해가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그런 대통령이 되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면서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은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였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죽을죄를 지



남경필 경기지사(오른쪽)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었다고 자복하고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인데 고개를 뺏듯이 들고 내가 될 잘못했다고 기고만장하다”고 지적했다.

◇탈당 도미노=?남 지사가 이날 탈당 후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더는 못 참겠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비주류 의원은 적지 않다. 이들을 다 합칠 경우 교섭단체 구성요건(20명)을 넘긴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막상 탈당을 결행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뚜렷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탈당 여부가 연쇄 탈당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 전 대표가 조만간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삼갔다. 유 의원은 일단 잔류 의사를 밝혔다.

◇정계개편 촉발=?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탈당으로 정계개편이 촉발되는 것이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정치적 지역기반이 여론에 가장 민감한 수도권인데, 이념적으로도 중도·개혁 진영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른바 ‘제3지대’를 구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정병국·김성태·김세연·김영우·하태경 의

원 등이 친박계가 쇠신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탈당할 것이라는 설이 돈다.

또 범여권에서는 새누리당 복당을 거부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나 탈당한 이재오 전 의원이 연대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가 연대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 전 대표는 전날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남 지사 등의 탈당과 관련,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박병이 일어날 것이다”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다면 개헌이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원순 “국무위원 다 사퇴하라”

국무회의 참석 설전... “국정농단 사태 책임져야”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위원과 설전을 벌였다.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이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이나 대통령이냐”며 사퇴를 요구하자, 국무위원들은 “박 시장이 국무회의를 정지판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안건을 의결할 수는 없지만, 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박 시장은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논의하는 게 정당하냐”고 반박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의결권

은 없어도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국민 입장을 대변하라는 뜻”이라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박 시장은 김현용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냐. 검찰 수사가 틀린 게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 시장은 회의가 끝나기 전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중간에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가 여전히 매우 실망스러워서 계속 앉았어야 어려울 정도로 분노감을 느껴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靑 7시간 해명, 당시 보고와 안맞다”

윤소하 “총괄부보다 대응 빨라”...이재명, 박대통령 고발

‘세월호 참사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의혹 제기과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해명이 당시 유관기관 상황보고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 간의 핫라인 통화 녹취록, 상황보고 등을 보면 청와대의 해명에 대한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오전 9시24분 국가안보실에서 문자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당시 국가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청와대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상황을 문자로 전파한 시간은 오전 9시31분으로,

해명대로라면 청와대 내부의 대응이 재난대응 총괄부보다 빨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행부장관 비서실장이 9시32분 장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내용은 언론 속보를 인용해 ‘350명 탄 여객선 침몰 중’이었는데, 청와대는 이보다 이른 9시24분에 ‘474명 탑승한 여객선 침수사고 접수, 확인 중’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실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이에 박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 측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지원 “황총리 대행체제 암담...새 총리 선임 시급”

“탄핵해도 박정권의 연속...여야, 총리 추천·탄핵 병행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 새로운 총리를 선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 결국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탄핵 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의결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과연 인용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도 확신

을 못 하는 상태”라면서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황 총리가 맡았을 때 야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떻게 됐든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 입장불변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의 여야가 대통령과 만나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금 국민이 개헌 논의를 받아

들이겠느냐’는 회의적 말씀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 물리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할 수 없는 부도목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은 김기춘과 우병우, 그리고 70억원을 최순실에게 상납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중 우병우의 통보로 반납했다는 설이 도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세 사람을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오는 秋·安

추미애, 오늘 국민본부 출정

안철수, 27일 대통령 퇴진운동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잇따라 광주를 찾는다. 추 대표는 23일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추진운동본부 출정식’에 참석한다. 이날 추 대표는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도 나선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는 27일 광주를 방문, 광주시당에서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을 벌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윤리위 ‘박대통령 징계안’ 28일 심의 착수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근)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가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로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다만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